

목포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 난항

“범죄 우려…내 지역은 안된다” 죽교동·북항동 주민들 강력 반발

목포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어선원 학숙소’ 건립 문제가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지역 이기주의인 ‘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치닫고 있어 목소리가 높다.

당초 목포시는 국비와 시비 15억 원을 들여 죽교동 581-8번지 6층짜리 한 오피스텔을 매입·리모델링해 외국인 선원 190명 정도가 생활할 수 있는 숙소를 오는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북항동 청·장년회 등 일부 주민들이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선원 숙소가 마련되면 학습권 침해와 외국인 범죄가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이에 목포시는 건립예정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TV설치, 파출소 순찰강화, 선주 책임관리, 숙소 규제 규정 준수 관리, 주민이 참여한 협의체 운영, 통역관 상주 상황실 운영 등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민설득에 나서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려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예정지 주변 6개 학교 교장단과 시의원 등이 목포시를 항의 방문, 3200명이 반대 서명한 서류를 시장에게 전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이 자리에서 정종득 시장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 3개월째 지속돼 온 갈등이 일단락되는 조짐을 보였다.

또 숙소 문제가 해결안 돼 차관주택 등 주택 가속으로 외국인 어선원들

그러나 대체 건물 물색에 들어간 목포시가 북항 바닷가 인근인 3층짜리 목포수협 건물(죽교동 620-86번지)을 겨우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번엔 ‘죽교·북항동은 안 된다’는 플래카드를 내건다는 등 또다시 반발하고 나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어선원 숙소 건립 문제가 ‘남비현상’으로 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게 일고 있다. 목포수협 건물은 당초 주민들이 주장한 ‘학습권 침해나 외국인 범죄 우려’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숙소 문제가 해결안 돼 차관주택 등 주택 가속으로 외국인 어선원들

이 개별 입주하게 되면 오히려 통제·관리가 안 돼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문제는 또 있다. 목포시의회는 조건부 승인까지 해뒀는데 시의회의 신뢰도 문제도 도마에 오르게 됐다.

또 당초 복지시설에서 숙소로 바뀐 점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여기에 선원들 복지 문제이기 때문에 목포수협이 일정부분 예산을 분담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아 ‘수협 분단’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한편 현재 목포에 사는 외국인 선원은 앙감망·유자망 어선 등 101척에 210명으로 이들은 선주가 마련해 준 서산 은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 기자 yousou@



한우 3근 사면 1근은 땀

지난 30일 3근을 사면 1근(600g)을 넘으로 주는 ‘3+1 한우고기 파격 할인행사’가 열린 목포축협 할인 행사장 주변 도로가 소비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BTL 완공 아트홀 사전 협의 좌오로 국고 못받아

강진군 220억원 부담 위기

강진군이 전국 최초 BTL사업(임대형 민간투자유치 사업)으로 완공한 ‘강진군 아트홀’에 대해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의 좌오로 국고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220억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 30일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 5월 BTL사업 방식으로 개관한 강진군 아트홀 사업 추진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의 행정적 책임으로 관련 부처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아 내년에 지급될 임대료 정부지급금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지시설 부분 국고지원금 220억에 대해 지원불가 통보를 받았다.

강진군 아트홀은 지난 2005년 당시 기획예산처 주관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490억원 규모의 전국 최초 BTL 선도사업으로 선정돼 강진군의 사업비 조정 의견에 따라 사업비를 440억원으로 축소했고 공사 3년만인 지난 3월말 완공했다.

BTL사업으로 건립한 강진군 아트홀은 내년부터 국고 보조비율에 따라 상한액 가운데 41%(군비 59% 부담)를 국고보조로 지원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사업비 축소 변경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사전협의 토록 중앙부처 지침이 마련됐지만 담당 공무원 A씨(시설 7급)가 이를 간

과하는 바람에 보건복지부 지원 끝이 반영되지 못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협의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끝의 국비 반영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주무부처에서 BTL 복합사업 선도사업으로 확정(2005년 4월)해 통보한 공문서에 총 사업비 490억 원으로 돼 있었고, 유관부처와 협의하라는 내용도 없어 당연히 국고보조가 이뤄질 것으로安心하고 있었다”며 “군민들에게 최고의 시설을 지어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일해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 너무나 죄송하고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황주홍 군수는 이 같은 사실을 군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한편 중앙부처의 중요한 공문이 담당자 손에서 제대로 처리되자 못한 경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감시부서에 지시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문화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복합시설로 공식적으로 지정됐으므로 잘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군수와 군의회 의장단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등을 방문해 국고 지원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등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경남발전연구원

해양문화 자원 활용 손 잡았다

남해안시대를 맞아 전남도와 경남도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상호 협력을 위해 손을 잡았다.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경남발전연구원은 지난 30일 경남발전연구원 4층 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도서해양문화 자원의 조사와 활용 방안’에 대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협약은 양 연구기관이 남해안시대를 맞아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 양 지역 도서 해양문화 자원의 조사·연구에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

대 위에서 이뤄졌다.

강봉룡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은 학문적 교류를 증진하고 남해안 시대 국가 도서해양정책의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서문화연구원은 지난 2009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문 한국(HK) 연구소로 선정돼 10년 동안 80억 원을 지원받은 삼성과 바다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이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전남도 숙박업소 서비스 개선 권역별 워크숍

전남도가 도내 숙박업소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남도-숙박 운영자간 워크숍’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가장 먼저 열리는 남부권 워크숍은 1일 오후 2시 해남 문화예술회관에서 장흥·강진·해남·진도·완도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미래농촌연구소 송병화 소장이 청결 및 친절, 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강연하고 무안군 해제면 ‘참새골 홍토 펜션’ 운영자인 최옥수씨 등이 민박 운영의 노하우와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어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민박, 웬센, 한국체육협

운영자 240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 초청 강의와 민박 운영주 성공사례 발표,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미래농촌연구소 송병화 소장이 청결 및 친절, 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강연하고 무안군 해제면 ‘참새골 홍토 펜션’ 운영자인 최옥수씨 등이 민박 운영의 노하우와 경험담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

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 22개 시·군의 민박, 웬센, 한국체육협

운영자 2400여명이 참석해 전문가 초

청 강의와 민박 운영주 성공사례 발

표,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된다.

미래농촌연구소 송병화 소장이 청

결 및 친절, 서비스 향상을 주제로 강

연하고 무안군 해제면 ‘참새골 홍토

펜션’ 운영자인 최옥수씨 등이 민박

운영의 노하우와 경험담을 들려줄 예

정이다.

/정필수기자 bungy@

전남 갯벌 저서생물 500종 이상 서식

〈底棲〉

국토해양부 조사…생물 다양성·생태 우수성 확인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의 42%를 차지하는 전남지역 갯벌이 종 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실시한 강진군 도암만 등 전남지역 갯벌 조사 결과 500종 이상의 저서생물(底棲生物=바다, 놀, 하천, 호수 따위의 맑바다에 서 사는 생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 우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서식지로서 보전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서부권 갯벌에서는 갯자왈이

와 각각류, 폐류 등 대형 저서동물이

총 306종이 서식하고, 동부권에서는

총 421종이 확인됐다.

강진군 도암만의 경우 자연하구의 기수역(汽水域=강물이 바다로 들어가 바닷물과 서로 섞이는 곳)이 발달해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된 기수·붉은·붉은발말똥게·대추귀고등 3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긴급조사를 실시한 영광 백수개벌역 역시 ▲ 15개 식물군락(17과 67종 식물종 서식) ▲ 암생식물 10과 24종 ▲ 조류 34종(법적보호종 7종)이 확인됐다.

서해안의 개방형 갯벌중 대표적인

백개벌은 매립에 의해 지형 변화가

심했으나 최근 들어 갯벌이 안정화되

면서 생태계 종이 다양화됐다. 특히 백수개벌에서는 노랑부리별새로 저어새 활조류이, 깃든머리불새, 알락꼬리마도요 등 희귀 조류가 관찰됐다.

국토해양부는 ‘습지보호법’(제4조)에 따라 전국의 갯벌생태 환경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매년 1개 권역씩 ‘연안습지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남을 비롯해 전북·충남지역 갯벌을 조사했으며, 올해는 인천·경기지역을 조사중에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멸종위기종 보전과 함께 습지보호지역 추가 지정, ‘암자르 습지’ 등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 갯벌보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전남산 수산물 日 수출 급증 원전사고 영향 4~5월 자년비 2배

지난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선 누출 사고 이후 전남지역 대일본 수산물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미

역, 김, 전복 등 전남 수산물 수출은 5월 말 현재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국은 일본 4396만달러로 전

체 수출의 85%를 차지했으며 중국

288만달러, 미국 259만달러 순이다.

특히 원전사고 이후인 지난 4~5월

일본 수산물 수출실적이 2329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은 1228만달러로 2010년 787만

달러보다 56%가 증가했고, 5월에는 1101만달러로 지난해(642만달러)보다 71%나 많았다.

이 가운데 해조류 수출 증가가 가장 많았다. 이는 방사능 오염으로 일

본내 해조류 생산량이 크게 줄어든

반면 방사능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

다고 알려져서 일본내 수요가 급증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최근 국내는 물론 일본과 중국에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전복을 비롯 전국에서 50% 이상 생산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다시마, 뽕, 미역, 김 등을 대

상으로 생산과 유통을 아우르는 어업인 주식회사를 만들어 해조류 수출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

대인동삼일부동산

나주혁신도시 전문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나주혁신도시에 투자하십시오!



상업용지 · 주차장용지 · 이주주택지 · 협의자택지

보물창고 (061)333-7077